제22권: 2005. 3. 22.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김동원 박혜진

1. 머리말 ····· 1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추이 ····· 2
3.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 6
4. 농정 현안과 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 ····· 10
5. 조사 결과의 시사점 ····· 15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동원 전문연구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머리말

○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1년 도하 개발의제(DDA) 출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방 농정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농업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우리 농업에 대한 변화 요구와 개방 압력은 농정의 기본 틀을 보호와 증산 중심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으로 전환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업화·규모화도 빠르게 진전되는 등 영농형태가 급변하면서 농촌사회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 이처럼 외부 요인에 의한 농촌사회의 급변속에서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농업·농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효율적인 농정여론 수집을 위해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당해연도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 이 자료는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지통신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며, 특히 농업인 의식변화 부분은 지난 10년간의 조사결과[1)]를 대비해 분석하였다.

---

1) 1993년~2004년. 『농업인 의식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추이

2.1. 농촌생활 만족도는 여전히 낮으나 부정적 인식은 줄어드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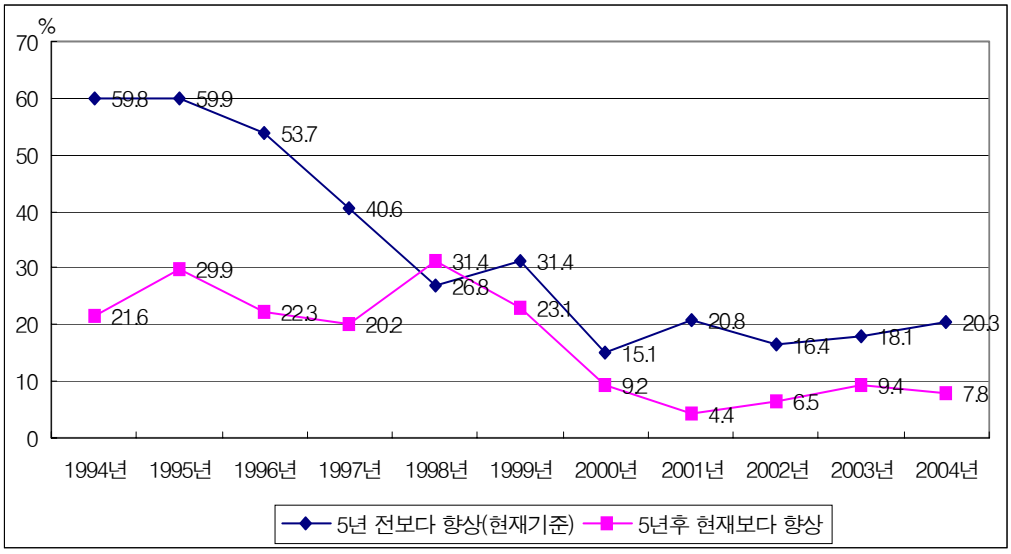
○ 먼저,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인식에서는 2004년 현재의 농촌 생활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향상되었다'고 인식한 농업인은 10명 중 2명(20.3%), 전년과 비교해서는 10명 중 1명꼴(10.2%)로 나타나 2003년 조사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농업인 비율은 전체의 7.8%로 전년(9.4%) 보다 1.6%p 소폭 감소하였으며,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67.8%로 전년(66.5%)보다 1.3%p 높아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5년 전과 비교한 평가 및 5년 후 기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농업인은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된 1994년 60%선에서 출발해 1998년 IMF 이전 30~50%선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이후 20%선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또, 5년 후 현재보다 향상되리라는 기대는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29.9%로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1999년까지 20~30%대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0년 들어 갑자기 9.2%로 낮아진 이후 2001년 4.4%, 2002년에는 6.5%, 2003년 9.4%로 약간 상승했다가 2004년에는 다시 7.8%로 약간 줄면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림 1. 5년 전과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인식과 기대 변화



○ 농촌생활 만족도(만족, 매우 만족)는 10명 중 1명꼴(10.9%)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불만(매우 포함)'이라는 응답은 48.8%로 전년에 비해서는 3.3%p 낮아져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감소하였다.

○ 농촌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교육여건 열악'을 가장 많이(28.8%) 꼽았으며, 다음으로 '복지시설 미흡'(22.8%),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1%), '주거 환경의 열악'(18.7%)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0세 미만 계층에서, 그리고 3ha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영농규모 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2.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003년 이후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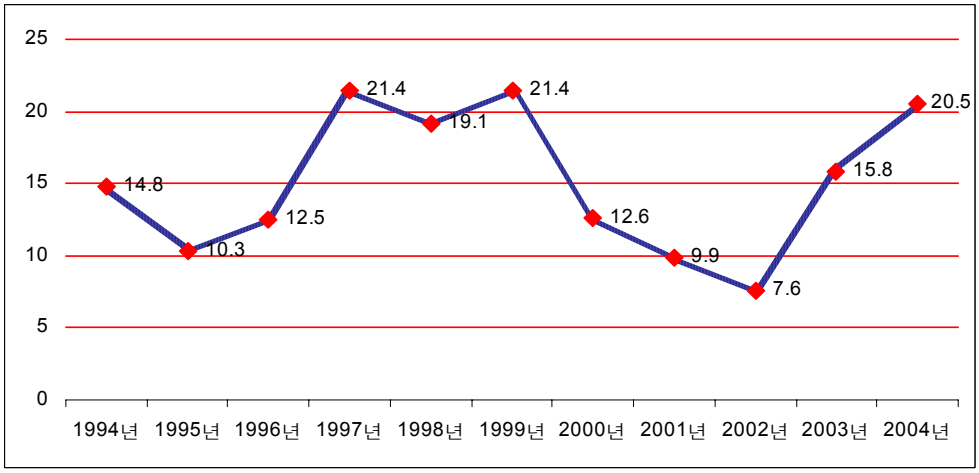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10명 중 2명꼴(20.5%)로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매우 불만 포함)'은 40.1%로 전년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7.7%p) 감소하였다.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10년 새 2002년 최저치를 보인 이후 200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도에 20.5%로 집계됨으로써 '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는 등 최근 2년째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 농업을 직업으로써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미흡'을 가장 많이(40.8%) 꼽아 소득 불안정에 대한 불만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래 불안'(38.5%),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11.2%), '힘든 육체적 노동'(8.9%), '좋지 않은 일반인의 인식'(0.3%)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업종사에 '매우 불만족' 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집단은, 연령대로는 60세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서, 주 소득작목별로는 과수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2. 최근 10년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 장래에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농업인은 25.3%로 전년(29.6%)보다 4.3%p 감소했으며,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의향을 가진 농업인이 63.2%로 전년(59.2%) 보다 4.0%p 증가해 점차 농촌을 떠날 의사를 가진 농업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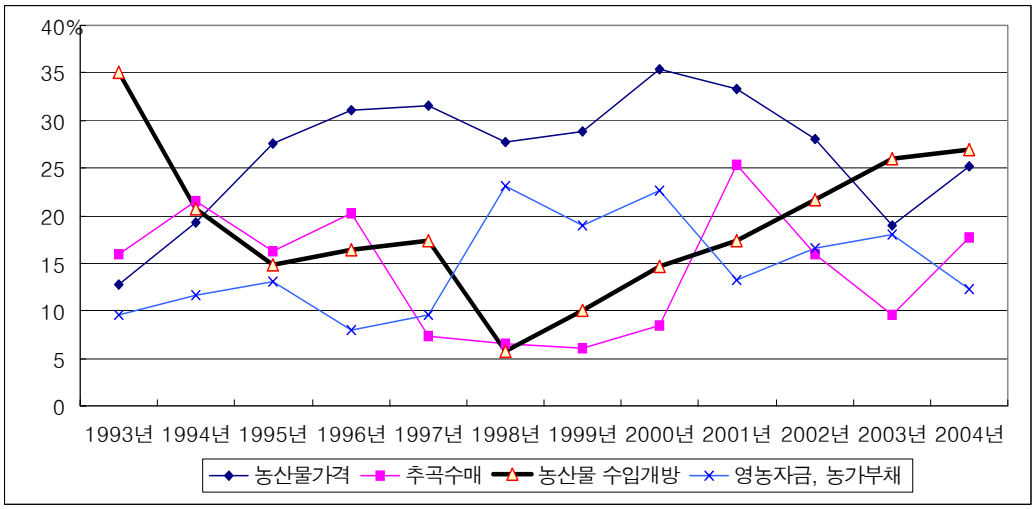
2.3. 수입개방에 관심이 많으며, 경영 여건이 점차 어려워진다고 생각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전년도에 이어 '농산물 수입개방'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관심도는 DDA, FTA, 그리고 2004년 하반기에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 최근 통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 최근 8년간 농업인의 관심사에서 수위를 유지했던 '농산물 가격 변동'은 3년 전부터 관심 정도가 줄면서 지난해 18.9%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심도가 역전되었으나, 2004년 다시 25.2%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 이 밖에, 특징적인 변화는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으로, 양곡유통위원회가 최초로 수매가 인하안을 제시했던 2001년 25.4%로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간 이후 2003년에는 9.6%로 낮아졌다가 2004년에는 다시 수매가 인하와 추곡수매제 폐지 등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17.7%를 기록하였다.

그림 3.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 사항 변화



○ 한편,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는, '농촌인력 부족'(24.2%)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21.9%), '농산물 수입개

방'(10.3%), '농작물 병충해와 기상·기후 조건'(10.1%) 등도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농사에 애로 사항으로 꼽혀온 것은 최근 수년간 변화가 없었지만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4년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63.8%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해 전년(53.7%)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한 비율이 10.1%p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농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3.1. 농업인 대부분은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경향

○ 2004년에는 세계무역기구의 농업개방 세부 원칙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와 압력이 강화되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10년간 개방이 유예되었던 쌀 시장의 개방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농업시장 개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 결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지만 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5%로 반수를 넘었으며, 상대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농업개방 폭의 조절도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9.4%에 그쳐 협상에서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대한 견해

(n=759, 단위 : 명, %)

	세계적인 대세		정부와 국민관심 정도로 막을수 있다		막을수 없으나, 농업개방 폭의 조절 가능		막을수 없으며, 농업개방 폭의 조절 불가능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령											
60세미만	55	16.8	51	15.5	198	60.4	22	6.7	2	0.6	328
60세이상	74	17.2	66	15.3	223	51.7	49	11.4	19	4.4	431
연간소득											
2천만원미만	81	16.8	83	17.2	251	52.0	49	10.1	19	3.9	483
2천만원이상	48	17.4	34	12.3	170	61.6	22	8.0	2	0.7	276
계	129	17.0	117	15.4	421	55.5	71	9.4	21	2.8	759

○ 한편, 농업인들은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적절히 대처할 계획’(44.2%),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18.4%), ‘농외소득원 확보 등 대안 마련’(12.2%) 등 적극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74.8%로 10명 중 7명 정도는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반해 응답자의 2.1%는 ‘전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2.5%는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고 응답해 10명 중 2.5명 정도는 개방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농업개방 진전에 따른 농가 대응

(n=759, 단위 : 명, %)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농외소득 확충 등의 대안 마련		전직을 위한 준비		적정히 대처할 계획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주재배 작목													
수도작	49	12.8	34	8.9	6	1.6	187	49.0	102	26.7	4	1.0	382
과수	27	25.2	9	8.4	6	5.6	46	43.0	19	17.8	-	-	107
노지채소	10	19.2	7	13.5	-	-	21	40.4	14	26.9	-	-	52
축산	11	16.9	12	18.5	1	1.5	25	38.5	16	24.6	-	-	65
시설원예	27	32.9	12	14.6	1	1.2	31	37.8	11	13.4	-	-	82
특작	11	23.9	12	26.1	2	4.3	15	32.6	6	13.0	-	-	46
기타	4	19.0	6	28.6	-	-	9	42.9	2	9.5	-	-	21
계	139	18.4	92	12.2	16	2.1	334	44.2	170	22.5	4	0.5	755

○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03년 조사와 비교하면, 적극 대응할 의사가 69.5%에서 74.8%로 5.3%p 증가하였고, 반면 소극적인 태도는 30.0%에서 24.6%로 5.4%p 감소함으로써 농업인의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2. 쌀 시장 개방 확대불구 10명 중 7명은 "경작면적 유지"

○ 정부가 쌀 관세화 관련협상의 국내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일련의 쌀산업 조치에 대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은 정부의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경작면적 조정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71.8%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고 응답해 전년(80.2%)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의 조사 결과와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대다수는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경작면적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축소할 계획' 이라는 응답은 12.5%,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1%에 머물렀고,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응답도 9.0%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3.5%였다.

○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벼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가(6.0%)보다 벼농사를 부소득원으로 하는 농가 계층에서 3배 이상 뚜렷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벼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가는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3ha 이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농가에서 비율이 높았다.

○ 한편, 경작면적 조정 여부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조사 결과에서도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 조정 의사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2002년도 조사에서는 2004년 쌀 재협상을 감안해 경작면적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20.4%였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단계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12.5%로 7.9%p 감소함으로써 개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산업 조치 발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쌀 협상 등 감안 2005년 벼 재배면적 조정 여부

(n=759, 단위 : 명, %)

	축소할 계획		현 수준을 유지		확대할 계획		협상 결과에 따른 조정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영농규모											
0.5ha미만	3	7.9	26	68.4	2	5.3	5	13.2	2	5.3	38
0.5~1ha미만	25	13.4	138	73.8	1	0.5	13	7.0	10	5.3	187
1.0~1.5ha미만	22	13.3	118	71.1	2	1.2	18	10.8	6	3.6	166
1.5~2ha미만	17	12.9	100	75.8	1	0.8	11	8.3	3	2.3	132
2~3ha미만	14	12.7	73	66.4	6	5.5	14	12.7	3	2.7	110
3ha이상	12	11.0	78	71.6	11	10.1	6	5.5	2	1.8	109
계	93	12.5	533	71.8	23	3.1	67	9.0	26	3.5	742

○ 쌀 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농업인 10명 중 7명(71.8%)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경작면적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고,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7.7%가 ‘고품질로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를 꼽아 품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다음으로는, ‘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23.6%), ‘브랜드화 등 유통 및 마케팅 혁신’(15.8%), ‘경영규모 확대’(11.5%), ‘기타’(1.5%) 등의 순으로 꼽았다.

표 4.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n=759,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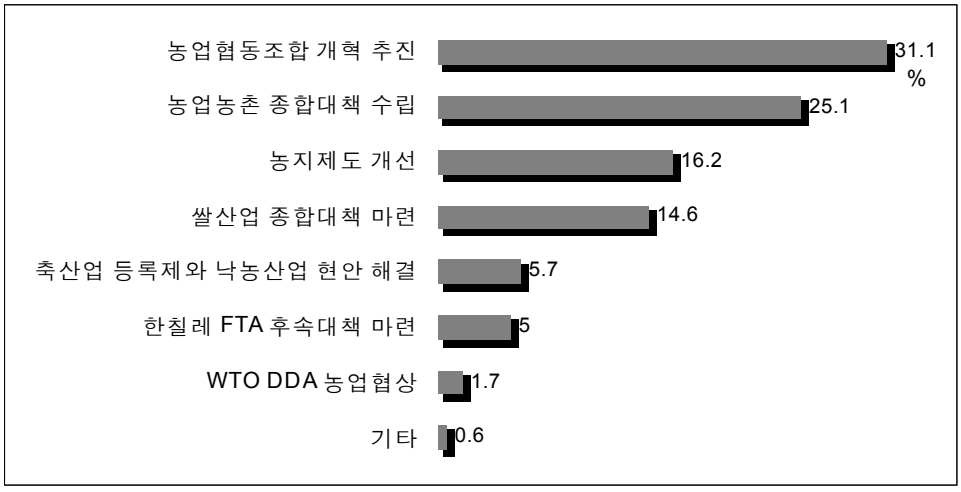
	가격경쟁력제고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화		브랜드화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주재배 작목											
수도작	91	23.9	55	14.5	181	47.6	47	12.4	6	1.6	380
과수	37	34.9	10	9.4	39	36.8	19	17.9	1	0.9	106
노지채소	15	29.4	6	11.8	22	43.1	7	13.7	1	2.0	51
축산	12	18.5	7	10.8	30	46.2	14	21.5	2	3.1	65
시설원예	13	15.9	4	4.9	44	53.7	21	25.6	-	-	82
특작	7	14.9	-	-	33	70.2	6	12.8	1	2.1	47
기타	2	10.0	4	20.0	9	45.0	5	25.0	-	-	20
계	177	23.6	86	11.5	358	47.7	119	15.8	11	1.5	751

4. 농정 현안과 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

4.1. 농정시책 중 협동조합 개혁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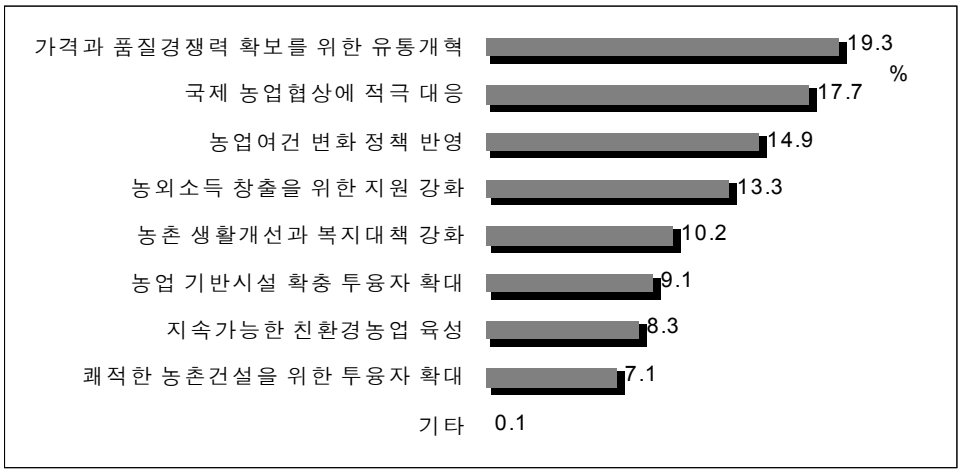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 역점 추진한 농정시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협동조합 개혁’(31.1%),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25.1%), ‘농지제도 개선’(16.2%), ‘쌀산업 종합대책 마련’(14.6%) 등으로 꼽았다.

그림 4. 2004년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의 긍정평가 순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19.3%),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17.7%), ‘농업여건 변화 정책 반영’(14.9%),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1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5. 향후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한 요구



○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인 21.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불만족’(매우 포함)은 34.5%로 나타났다.

○ 불만족 요인으로는,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 못할 것’(30.2%), ‘낮은 목표 가격’(25.9%),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도’(20.0%), ‘낮은 고정형 직불금’(18.0%), ‘대상농지 제한으로 소득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5.1%) 등을 꼽았다.

4.2. 추곡수매제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 대체로 긍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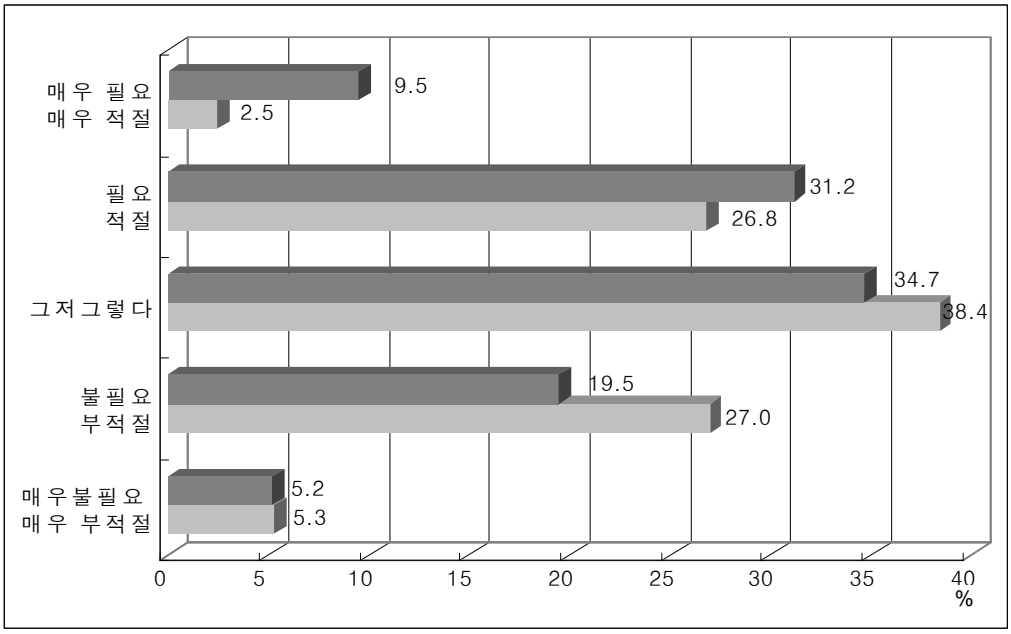
○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 중 4명(40.7%)이 개정 필요성(매우 포함)에 대해 동의하였다.

○ 상대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이 '불필요'(매우 불필요 포함)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인 비율은 24.7%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경우도 34.7%로 집계되었다.

○ 양정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10명 중 3명(29.3%)이었으며,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32.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필요성 인식에 비해 개정내용에 대한 긍정인식이 다소 낮아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농업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적정한 시기에 대해서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추곡수매제 유지'(70.0%), '내년부터 당장 도입'(2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양정제도 개편에는 찬성하면서도 도입시기는 DDA 협상 타결 이후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양정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개정내용에 대한 인식



○ 농업인들은 향후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될 경우에도 '현 경작규모와 작부체계 유지'(42.7%) '경작규모 유지, 작부체계 변

경'(33.3%), '영농규모 축소'(12.0%), '영농규모 확대'(5.6%) 등으로 응답하여 소득보전제 시행에도 농가의 급격한 경영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주 소득원을 벼농사로 하는 농가 계층에서 영농규모와 작부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견과 영농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벼 재배 농가 소득보전직불제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소유규제 완화 등 농지제도 개편 대체로 적절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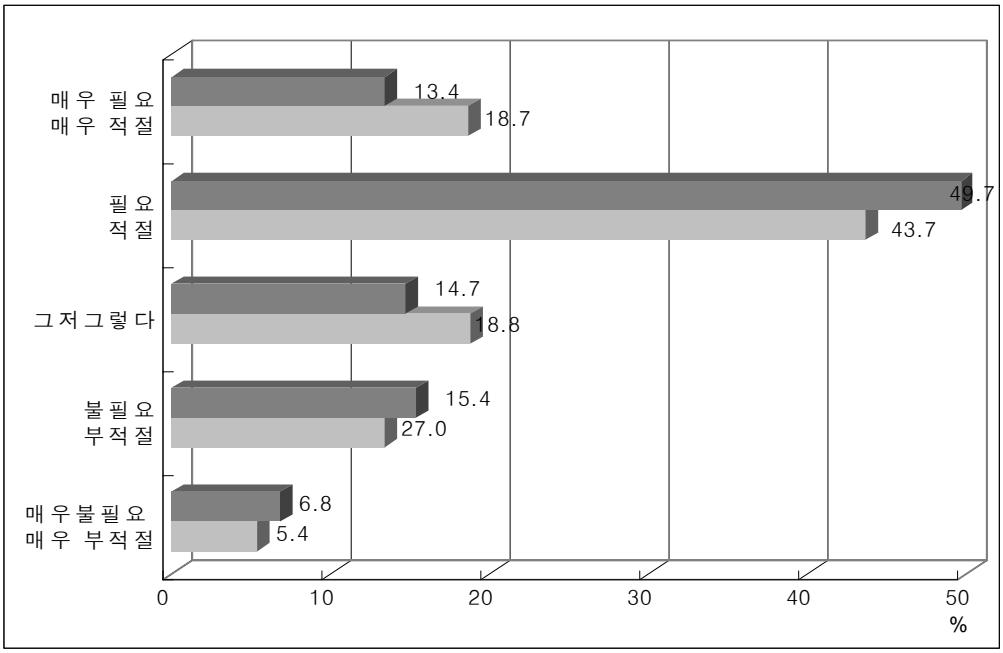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농업인 6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고,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9.0%, '잘 모른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나 10명 중 7명 정도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매우 적절'(13.4%), '적절한 편'(49.7%) 등 전체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22.2%에 그쳐 긍정적인 견해가 뚜렷하여 개정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개정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농지제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농업인들은 그 이유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42.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도시인들의 농촌투기 극심'을 우려하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최근 수년간의 인식조사에서도 농업인 70% 내외가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7.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내용에 대한 인식



4.4.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 농업인 33.7%는 ‘잘 진행되고 있다’(매우 포함)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34.4%로 나타나 아직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조직 및 임직원의 보수문제’를 가장 많이(46.8%)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재정립’(30.6%),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 역할 변화’(21.0%) 순으로 꼽아 협동조합 개혁이 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협동조합 개혁 주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60.9%), 다음으로는 ‘정부’(14.4%), ‘농민단체’(13.8%), ‘협동조합 임직원’(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농업종사 만족도가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개방 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만, 농산물시장 개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농업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을 지키고 개방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일반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한편으로, 개방에 대응해 상당수 농업인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농정이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현실감 있게 수립된다면 정책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농업인들은 농업의 여건 변화와 개방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산업 발전 방안과 농지제도 개편, 협동조합 개혁 등 정부가 최근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이 같은 일련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정부의 대응과 의지에 상당수 농업인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 인식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내·외부의 개방 압력에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현장 농업인 간의 현실인식에 일정부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같은 농업인들의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개방 협상에 따른 각종 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구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